



여론브리핑 제69호 (2010.1.14)

EAI · 매일경제 신년기획 <3년차 MB 정부 국정과제와 전망>

최우선 국정과제 : 양극화 해소 37.4%, 경제성장 20.8%

성장 · 안정 우선 컨센서스 약화, 분배요구 및 이념갈등 커질 듯

국정지지율 44.3% 상승세 주춤, 올 해 정국 불안요인 클 전망

조사개요

조사일시 : 2010년 1월 11일~12일

표본크기 :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

표본추출 : 성, 연령, 지역 인구비례에 맞게 표본할당 후 무작위 추출 (가중치 부여)

표집오차 : 95%신뢰수준 오차범위 ±3.1%

응답율 :

조사방법 : 전화조사(CATI)

조사기획 : 동아시아연구원(EAI: 원장 이숙중 www.eai.or.kr)

조사기관 : 한국리서치(대표: 노익상 www.hrc.co.kr)

EAI 여론분석팀

팀장	이내영(EAI 여론분석센터 소장, 고려대 교수)
연구진	이숙중(EAI 원장, 성균관대 교수)
	전재성(EAI 아시아안보센터소장, 서울대 교수)
	서상민(EAI 연구기획국장)
	정원철(EAI 여론분석센터 선임연구원)
	정한울(EAI 여론분석센터 부소장)

□ 대표집필

EAI 정한울 여론분석센터 부소장(02-2277-1683/018-280-3230/hwjeong@eai.or.kr)

EAI 정원철 여론분석센터 선임연구원(02-2277-1683/017-279-4536/cwc@eai.or.kr)



여론이 본 집권 3년 차 MB정부 최우선 국정 3대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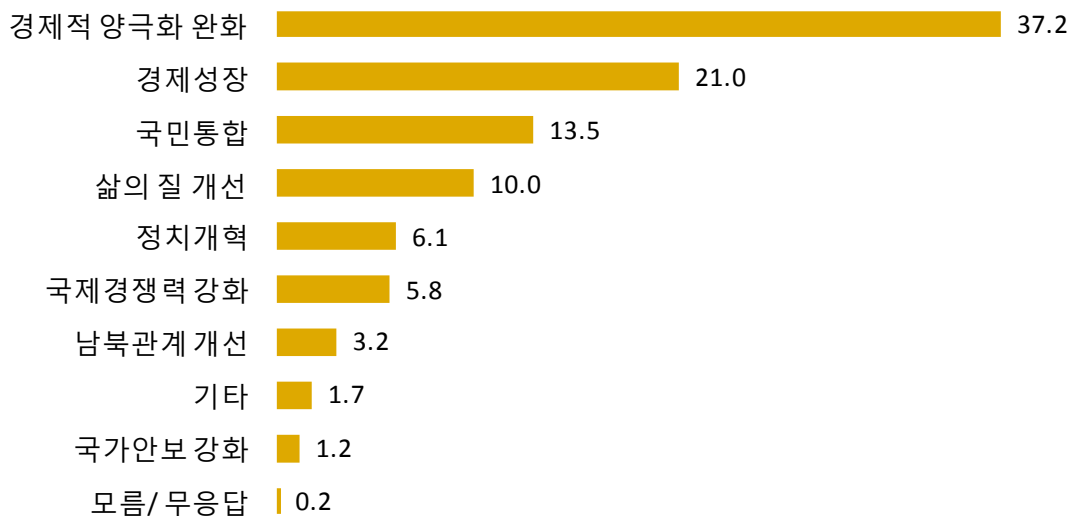
“양극화 완화 37.2%· 경제성장 21.0%· 국민통합 13.5% 순(順)”

집권 3년차를 맞이하는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에 대해 37.2%에 국민들은 경제적 양극화 완화를 가장 많이 꼽았다. 경제성장을 꼽은 경우가 21.0%로 그 뒤를 이었다. 국민통합이나 삶의 질 개선이라는 경우는 각각 13.5%와 10.0%였다. 이 밖에 정치개혁(6.2%)이나 국제경쟁력 강화(5.8%), 남북관계 개선(3.2%) 등을 정부가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 꼽은 응답은 한 자리 수 지지에 머물렀다. 올 해도 양극화 해소와 성장을 두 축으로 경제살리기에 전념하면서 사회통합에 힘쓰라는 메시지다.

집권 2년차인 2009년 2월에 동일한 질문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경제 양극화를 꼽은 응답이 33.9%였고, 경제성장을 꼽은 응답이 26.6%, 국민통합을 꼽은 응답이 13.9%로 역시 최우선 3대 과제로 선정된 바 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양극화 해소에 대한 요구는 높아지고 경제 성장에 대한 요구는 낮아진 셈이다. 2010년 경제성장을 등 각종 거시 경제지표에 대한 낙관적 전망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산층과 저소득층에서는 오히려 일자리 감소와 소득 감소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고용 없는 성장의 문제에 대한 불신이 국민여론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는 동아시아연구원(EAI : 원장 이숙종)과 매일경제가 1월 11일~12일 양일간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민여론조사 결과다. 전화인터뷰로 실시한 이번 조사의 표집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다. 실사는 한국리서치가 담당했다.

[그림1] 최우선 국정과제(%)





“성장 · 한미동맹 우선” 컨센서스 약화 : 진보 대 보수 입장 팽팽해져

- 분배 48.5% vs. 성장 49.4%, 1년 전 경제성장 우선 57.7% (8.3%p 감소)
- 한미동맹 강화 지지 감소 1년 전 43.7% → (34.7%로 9.0%p 감소)

2008년 하반기 미국발 금융위기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 이래 불과 한국은 출구전략에 대한 준비를 시작할 정도로 빠른 경제회복세로 돌아서 국내외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러한 경제회복이 가능했던 것은 정부지출 확대와 낮은 금리에 기반 한 통화정책, 기업들의 자생 노력 등이 주요한 요인이겠지만, 경제 친화적, 사회안정 친화적인 국민여론도 한 몫 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조사에서는 올해 사회양극화와 고용없는 성장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분배의 목소리가 다시 커지고 한미동맹 중심의 안정희구적 이념노선에 대한 지지가 완화되면서 진보 대 보수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는 것으로 나타나 이념갈등의 소지가 커지고 있음을 예고하고 있다.

사실 2009년에 국내적으로는 용산사태, 미디어법 파동, 두 전직 대통령의 서거와 같은 휘발성 있는 쟁점들이 연이었고, 외교안보 차원에서도 북한의 대포동 미사일 실험, 제2차 핵실험 등 불안요인들이 적지 않았지만 비교적 최악의 혼란이나 불안요인으로 작용하지는 않았다. 이명박 대통령 집권1년 차에 미쇠고기 수입 문제로 취임 이래 6개월 이상을 촛불시위와 씨름하며 국정마비를 걱정해야 했던 것과 대조적이다. 만약 이러한 쟁점들이 집권 1년 차 때처럼 국정마비를 우려할 정도의 이념 갈등으로까지 비화되었다면 지금처럼 빠른 경제회복을 낙관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다. 경제 위기라는 특수 상황 하에서 성장과 안보를 우선하는 사회적 합의의 분위기가 마련된 것이 주된 요인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경제위기 직후에 실시한 EAI의 2009년 2월 조사에서는 우리 사회 대표적인 이념갈등을 대표하는 분배 대 성장, 자주 대 동맹 등의 문제에 대해 내뿜 쟁기기보다는 성장을 우선하고, 자주외교의 명분보다 동맹의 실리를 우선하자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었다. 우선 분배 대 성장노선에 대해 2009년 2월 조사에서는 분배를 우선해야 한다는 입장이 41.5%, 경제성장을 우선해야 한다는 입장이 57.7%로 정부의 성장 우선론에 손을 들어주었다. 참여 정부 내내 한미관계 뿐 아니라 국내에서도 최대 갈등쟁점으로 떠올랐던 자주외교 노선 대 한미동맹론의 쟁점에 대해 탈미 자주외교를 지지하는 입장은 29.9%, 중도 노선은 25.9%에 그친 반면 한미동맹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 43.7%로 가장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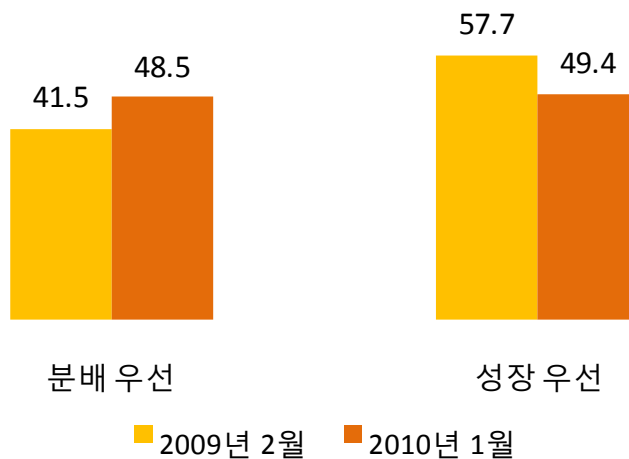
그러나 이번 조사에서는 한국사회의 안정보수 심리를 대표하는 성장 및 동맹우선론에 대한 사회적 지지기반이 약화되고 있다. 분배우선론은 1년 전에 비해 7.0%p 상승한 48.5%, 반면 성장우선론은 8.3%p 감소한 49.3%로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출구전략을 고민해야 하는 정부로서 작년에 비해 정부지출이나 저금리정책의 운용은 제한 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국민들의 복지 및 분배요구가 커지는 것은 올해 경제정책 운용의 최대 복병으로 작



용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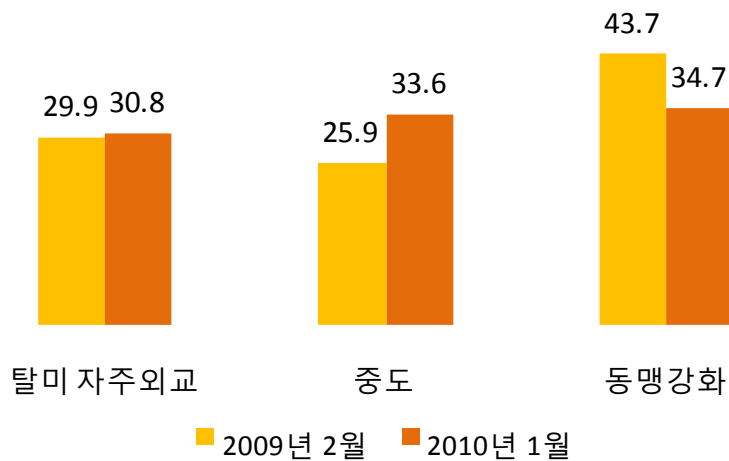
안보 문제에 있어서도 자주외교를 지지하는 입장은 30.8%로 지난 해에 비해 큰 변화가 없었지만 동맹강화를 지지하는 여론이 43.7%에서 34.7%로 9%p 가까이 감소하여 자주 대 동맹의 입장 역시 팽팽히 맞서는 형국이다. 2009년 경제회복세를 뒷받침한 성장주의, 동맹우선의 안보관에 대한 사회적 합의 분위기가 약화됨에 따라 2010년에는 현재의 세종시 갈등이나 지방선거 등을 계기로 정치, 이념적 갈등이 보다 강하게 분출될 수 있으며, 정부 및 시민사회의 갈등관리 능력이 시험대에 오르게 될 전망이다.

[그림2] 분배와 성장 인식 비교(%)



* 모름/무응답 표기하지 않음

[그림3] 바람직한 한미관계에 대한 선호(%)





이명박 대통령 국정 지지율 44.3%, 50% 대 진입은 반짝 효과(?)
 정부수정안 발표(11일) 직후 세종시 수정안 찬성 여론(58.8%) 높아
 지방선거 앞두고 각종 정치연대도 정국 요동치게 할 요인

연말연시 국내외에서 발표하는 각종 거시 경제지표에서 한국경제에 대한 낙관적 전망이 주를 이루고 대통령이 아랍에미레이트(UAE) 원전수주 과정을 직접 주도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연초에 실시한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국정지지율이 5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권 중반기에 과반수 지지율을 기록하는 것은 유례 없는 일로서 집권3년차를 맞이하는 대통령의 행보에 자신감을 보여주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 발표 직후에 실시한 이번 매경·EAI 조사에서는 대통령 지지율이 다시 44.3%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매우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10.0%, 대체로 잘하고 있다는 34.3%였다. 반면 별로 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38.1%, 매우 못하고 있다는 응답도 16.7%로 과반수를 훌쩍 넘었다. 이는 지난 12월 조사 당시 지지율 수준으로서 50% 지지율 돌파는 반짝 현상이었음을 보여주는 결과다. 세종시 수정안 발표 이후 급격하게 냉각되고 있는 정국의 영향과 함께 98년 IMF이래 최대의 일자리 감소를 기록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는 등 최근 경제침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조금씩 커지고 있는 현상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세종시 추진방향에 대해서는 최소한 정부 부처가 이전하는 원안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응답 비율은 38.2%였고, 교육, 과학 그리고 기업도시로 수정하여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은 58.8%로 나타났다. 모름/무응답 3.0%였다. 세종시 문제에 대한 입장 번복을 사과한 이명박 대통령과의 대화 직후에 실시한 11월 조사에서는 동일한 문항으로 조사한 결과 원안 유지의 입장이 31.4%, 수정안 찬성 여론이 50.4%였고, 입장을 유보한 응답이 18.2%에 달했다. 11월에 비해 원안에 대한 지지는 6.8%p, 수정안에 대한 지지는 8.2%p 동반 상승했다. 삼성, 한화 등의 대기업과 고려대 등 일부 대학의 세종시 이전 방안이 발표되면서 입장 유보층에서 입장을 정한 응답자들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는 수정안에 대한 우호적 여론이 우위를 점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여론의 흐름에도 불구하고 세종시 문제는 2010년 상반기 정국의 뇌관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11일 정부가 세종시 수정안을 발표한 이래 정부여당 내에서도 친이 대 친박의 갈등이 수면 위로 급부상하고 야권은 세종시 이슈를 중심으로 반정부 연대를 강화하면서 6월로 예정된 지방선거를 버르는 등 정치적 갈등은 쉽게 가라앉기 힘든 상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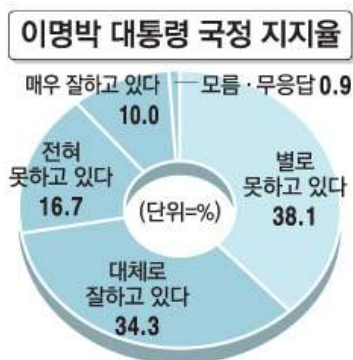
올 지방선거가 예년에 비해 주목 받는 것은 참여정부 후반기 이래 현 정부 집권 초기까지 45~50%대의 지지율을 기록했던 한나라당이 집권2년 만에 지지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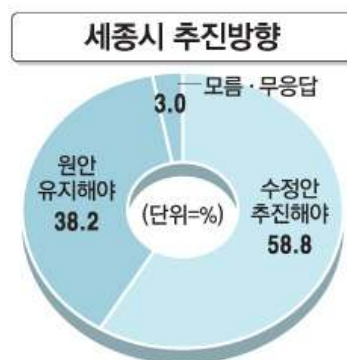
20~30%대를 오가는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야권연대의 가능성과 효과가 커질 조짐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의 지지율이 45~50%대일 때는 무당파 층을 제외할 경우 모든 야당의 지지율을 합해도 한나라당 지지율에 못 미쳤다. 2008년 2월 현 정부 취임전후에는 한나라당 지지율이 43.7%인 반면 당시 범여권의 경우 당시 분당으로 갈라진 대통합민주신당과 구민주당의 지지율을 합해도 12.8%에 그쳤다. 자유선진당 2.9%, 민주노동당 4.4%, 창조한국당 5.3% 등을 모두 합해도 한나라당 지지율에 크게 못 미쳤다.

그러나 2년이 지난 지금 정당지지기반을 살펴보면 한나라당 지지율은 33.9%, 민주당 22.2%, 민주노동당 7.5%, 친박연대 6.3%, 자유선진당 3.6%, 가칭 국민신당 2.5%, 진보신당 2.1%로 이제는 사정이 다르다. 단순 산술합계로 보아도 이제는 야권의 정당지지율을 합하면 한나라당을 지지율을 넘어서고, 민주당은 물론 자유선진당, 친박연대 등 일정한 지역기반을 갖추고 있는 야당이 존재한다는 것도 지방선거의 야권 연대의 필요성을 높여주는 요인이다. 이 과정에서 여야갈등은 물론, 여권 내부의 갈등, 야권연대 과정에서 불거질 수 있는 야권내의 갈등이 불거질 것은 명확해 보인다.

[그림1] 국정지지율(%)



[그림2] 세종시 추진방향(%)



[그림3] 정당지지율(%)

